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29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28.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28.(금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3980)	담 당 자	최재영 사무관(044-203-3982)

전기안전공사의 「전기안전관리대행」 업무 조기 민간이양

- **전기안전공사는 '21.4월 시행된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 따라, 8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대행업무를 5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민간이양 결정(8년→5년)**
- **이를 통해, 약 824억* 수준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을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**

* 공사 대행업무 누적사업량 **(8년)** ❶2,341억원, **(5년)** ❷1,517억원 → **(❶ - ❷) 약 824억원 수준**

※ 공사 인력, 대행업무 매출의 변화(현재 517명, 연 450억 → 5년후, 59명, 약 연 100억 수준)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문승욱)는 전기안전공사(이하 "공사")가 수행하는 **'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*(이하 "대행업무")'**를 **공사의 공공성 강화,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**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단축하여 **조기 민간이양**(8년→5년)**을 추진**한다고 밝힘

*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, 소규모 전기설비(1000kW 미만)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(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)

□ 금번 조기 민간이양 계획은 공사가 **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사업**을 **8년**(~'29.3월)**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**하도록 **「전기안전관리법**('21.4.1 시행)」에서 규정한 사항을,

○ 공사의 **공적기능 강화** 및 **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**를 위해 **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5년 이내**(~'26.3월) **민간에 이양**하기로 결정함

* 민간 조기이양에 따른 공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경영기반 확보(재무건전성,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운영 등)을 고려하여 5년에 걸쳐 단계적 이양 추진

□ ‘74년부터 공사는 **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·정기검사 등 공적업무 수행**과 함께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분야인 **대행업무에 대규모의 인력**(517명, 총 정원 3,163명의 16.3%)**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**해 옴

○ 이로 인해, 민간업체들은 공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**플레이어로 인식**하여, **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원인**이 되어 왔음

* 자가용전기설비 ‘검사기관’이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수행

□ 이에, **공사의 공공성 강화, 민간 일자리 창출** 및 **사업 활성화** 등을 위해 대행업무의 **민간이양 시점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**하기로 함

○ 다만, **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**하는 **도서·산간 오지 등의 일부 지역**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**현행과 같이 유지**하기로 하였음

□ 한편,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**약 824억 수준의 대행업무 사업량**(8년→5년)**이 민간시장에 이전**됨에 따라 **신규 일자리 창출**(연 450명 수준), **사업 활성화**(연 350억 수준)**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○ 공사도 대행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존 인력을 **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, 신기술 분야**(ESS, 신재생 등) **정밀진단 등에 기술력 고도화 후 재배치**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한 **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**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□ 이와 더불어, 앞으로도 **국민안전 중심의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** 등을 통해 **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**하면서, **동시에 민간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**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

【붙임】「전기안전관리대행」업무 민간 조기이양 추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(☎044-203-39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전기안전관리대행」 업무 민간 조기이양 추진



"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을 앞당긴다."

민간이양 시기 단축 ('26.3년까지 이양 완료)

공공성 강화

☑ 기능조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



☑ 전문성 향상, 역량 강화를 통해 검사품질 제고 및 신뢰도 향상

핵심기능 주력

민간 이양



8년 → 5년으로 단축

민간 활성화

☑ 투자촉진, 시장활력 제고 (연 350억원 수준)



☑ 민간 전기안전관리자 고용 창출 (연 450명 수준)



일자리 창출 기여

대행업무 조기이양시 매출액 인력추이 비교

